

권성동 “개헌·탄핵 철회” vs 이재명 “국정협약체 참여 촉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회동

지속적 협의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권성동,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강조
이재명, 헌정 질서 복귀 가장 중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것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개헌과 정치공세적 탄핵 중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여당의 국정안정협약체 참여를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 오어 낫팅(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부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약체

에 참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 직무대행은 제가 제안 드린 ‘국정안정협약체’에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단끼리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 대당 토론이나 논의는 매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창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지 노심초사하다 보면 본인도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비공개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조속히 논

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이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정례회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도 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여야가 협의를 이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약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의원 총회를 거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협약체 불참 입장을 유지한다고 이야기 했다’는 질문에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가진 견해들을 전달했고, 의총을 거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상황만큼 일하는 국회, 상황 수습의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좀 낮추자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직무대행의 개헌 제의에 대해 이 대표는 진지하게 경청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도 경청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선출... 與 불참 속 의결

헌재 9인 체제 복원, 인청특위 출범 여당의 협의·회의 불참 갈등 심화 임명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의 견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

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최연장자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 대신 박 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광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광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

로 논의할 시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예진 기자

尹 ‘내란수괴 수사’ 급물살...헌재, 4개월 내 결론 낼 듯

법리 다툼 적어 신속 탄핵심판 가능성
수사기간 총돌, 조율 필요성 제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경찰(공조수사본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에 나선 상황이며, 윤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월에 늦어도 4월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양 갈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 출범 전이라도 수사 기관 간 협력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뉴스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불출석할 경우,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소환장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2차 소환 통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21일 나와 조

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다퉀 1, 2차 소환장을 보내는 것을 두고는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다. 통상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2~3차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서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 각 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

근·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입장인데, 전날까지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기형적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 기관들의 주도권 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 수사 기관들이 저마다 수사 주체를 자처하고 나설 때부터 예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일찌감치 120여명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키며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다. 150여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군검찰과 손을 잡은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에 관여한 다수의 군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같은 달 8일 독립수사기관 임을 강조하며 사건을 넘기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다. 상당수 수사 대상자가 겹치는 데다 혐의 내용도 비슷한 사건에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뛰어든 것이다.

중복 수사, 수사 기관 쇼핑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됐지만, ‘교통정리’는 윤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현실점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하는 공조본이 꾸려졌지만, 검찰은 제외됐다.

/서예진 기자